

## 동북아 영토분쟁과 아Q들

박홍서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객원교수)

- I. 미국, 동북아 영토분쟁의 기획자?
- II. 영토분쟁, 권력의 필수품?
- III.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동북아시아는 19세기의 유럽이다” 라는 국제정치의 오래된 주장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상황은 국가이익을 최고로 삼는 근대 주권국가들끼리의 끊임없는 편가르기와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다툼은 결국 20세기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최근의 동북아 정세만 보면 어제의 유럽이 오늘의 동아시아란 말이 맞는 듯하다. '동북아 공동체'라는 말이 언제 오겠나 싶을 정도로 동북아는 영토주권 수호라는 전통적 근대국민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정권들이야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제 국민들까지도 ‘총력전’ 분위기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상대 민족을 ‘멸절’ 케 해야 한다는 히틀러식 주장도 횡행한다. 2012년에 이런 말이 난무하는 건 분명 정상이라 말하기 어렵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동북아 영토분쟁의 이면을 들춰보면 음험한 권력관계가 드러난다.

### I. 미국, 동북아 영토분쟁의 기획자?

동북아 영토분쟁은 애초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역사로부터 비롯되었다. 일본은 1895년과 1905년 조어도와 독도를 각각 오키나와현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다. 일본은 정당한 행정절차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청일전쟁과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은폐된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입찰을 따내는 어느 조폭영화의 한 장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졸렬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동북아 영토문제는 근원적으로 해소되어야 했다. 실제로 타이완과 그 부속도서는 중국에 반환되었고, 독도 역시 1946년 1월 소위 ‘맥아더라인’을 통해 일본령으로부터 명확히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패권적 국가이익이 동북아 영토문제에 연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대일강화조약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은 조어도를 포함한 오키나와 지역은 자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설정하고, 독도문제는 아예 논외로 내버려 둬으로써 영토문제를 이후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미국의 행태는 대공산권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적 계산의 소산이었다.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은 나치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미소 협조체제의 균열, 곧 냉전의 시작이었다. 미국에게 일본의 지정학적 ‘몸값’은 클 수밖에 없었다. 맥아더의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최고’ 전범 천황을 끌어내는 대신에 그를 이용해 향후 일본을 미국의 충순한 파트너로 묶어두려 하였다. 극소수의 일급 전범들에게 사형이 집행됐을 뿐 도쿄재판의 전범들은 대부분 석방되거나 정계로 복귀했다. 반대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과 비관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이 감행되었다. 이른바 ‘역코스’의 시작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은 바로 이러한 역코스의 결과물이었다.

사실 ‘북방 4개도서(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간 갈등 역시 미국의 작품이다. 북방 4개도서는 1855년 러일 화친조약에서 이미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고 1875년에는 이에 더해 쿠릴열도 전체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차지한 것과는 성격이 명확히 다른 평화적 국경조약의 결과였다. 그러나 1945년 2월 미국은 알타밀약을 통해 소련의 대일본 참전을 대가로 쿠릴열도의 관할을 인정해주고 소련은 그해 9월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명문화되었다. 패권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였다.

그리고 2012년, 미국이 뿌렸던 영토분쟁의 씨앗은 이제 쉬 꺾어내기도 어려운 성긴 잡초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한중일간 영토분쟁으로 미국은 당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각각 동맹으로 엮여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일간 갈등 역시 미국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G2를 넘어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하는 C2 개념까지 거론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 말이다. 과연 미국은 동북아 영토분쟁에 당황하고 있을까? 패권국가의 세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중일 갈등이 그리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는 선에서 말이다.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든 지배권력의 최종 목표는 동일하다. 권력의 유지! 그리고 강화! 그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중 하나가 바로 ‘충성경쟁’ 을 조장하는 것이다. 상호 경쟁하는 행위자들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유지한다. 경쟁하는 행위자들은 조정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근시대 말엽 진나라가 구사하던 ‘연횡’ 전략과 닮았다. 물리적 힘이 곧 가치규범이 되는 국제정치에서 그 균형자의 역할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국가, 즉 패권국의 몫이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바로 그러한 균형자가 되었다.

독도나 조어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사뭇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배경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미국이 독도문제에 침묵하고 독도를 ‘리앙쿠르암’ 으로 표기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역시, 한일간 갈등에서 한발 물러나 짐짓 중립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하려는 속내를 드러낸다. 최근 APEC 정상회담에서 클린턴은 독도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온도를 낮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독도문제의 원인제공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다.

조어도 문제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해결을 기대”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미국은 조어도가 미일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동맹국 일본에 대한 립서비스에 가깝다. 그보다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누구편도 들지 않지만 군사력 사용이나 일방적인 주권 주장 등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너희 둘이 레드라인(군사적 충돌)만 넘지 말고 마음껏 싸워라’ 가 아닐까? 역시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연횡 논리라면, 당연히 미국이 우려하는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이 뭉쳐 미국에 대항하는 ‘합중’의 상황이다. 주류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세력균형의 논리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과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모두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두는 ‘동북아공동체’ 수립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도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당연히 미국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노무현 정권은 내내 “배은망덕” 한 정권이 되어버렸고, 하토야마 정권은 미국발 ‘후텐마 폭탄’ 을 맞고 아예 붕괴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새 정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노골적인 친미노선을 추구하였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 하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조되었다. 한일 군사협정은 이 와중에 생

긴 엿박자였으리라. 물론 그렇다고 미중관계가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고위급 외교를 통해 언제든지 굳건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2011년 1월 미중정상회담은 그 알파요 오메가였다.

미국이 동북아 영토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별히 미국의 DNA가 불량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라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라도 패권적 지위에 있다면 미국과 같은 행태를 보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그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대항 전략도 있게 마련이다. 역시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합중’ 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공동체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의 지배권력은 ‘묻지마’ 친미를 외치고 있다. 그것이 우매함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전략적 선택이라면 애기는 달라진다. 영토분쟁이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의 부산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 II. 영토분쟁, 권력의 필수품?

권력의 속성이 권력의 유지와 강화라면, 그것은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더 더욱 그렇다. 20세기 후반 전통적 의미의 강대국간 전쟁은 소멸됐다. 핵무기라는 멸절무기가 등장하고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너무도 긴밀히 얽혀버려 상호간 전쟁은 불가능해졌다. 이제 강대국들은 안정적 국제질서를 위해서 테러리즘과 ‘실패국가’ 들을 관리해야 할 긴밀한 동업자가 되어 버렸다. 강대국가간 제로섬 게임의 논리는 이제 ‘상생적’ 논제로섬 게임의 논리로 변화한 것이다. 동북아도 다를 바 없다.

이와 같다면 영토문제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국가들의 행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국내용’ 이란 혐의가 짙다. 영토문제는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소재가 된 것이다. 보통 지배권력은 직접적 폭력이외에 시큐리티(안보; 안전; security)의 유통과 규율장치를 이용해 자신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우선 시큐리티의 유통.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나리오에는 언제나 ‘공공의 적’ 이 등장한다. 국민보호라는 권력의 정당성은 그 공공의 적으로부터 ‘발명’ 된다. 토마스 홉스가 설파하던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다. 따라서 권력은 끊임없이 시큐리티를 과잉생산하고 또 그것을 유통시킨다. 인간, 식량, 학교 등 사회 모든 것이 시큐리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시큐리티의 최정점에는 언제나 국가안보가 있었다. 그 국가안보를 지키는 명분하에 20세기에만 수억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온통 위선으로 가득찬 시큐리티다.

아무튼 시큐리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영토분쟁만큼 적절한 소재는 없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모두 권력교체기에 있는 동북아 권력들에게는 더더욱 효과적인 권력 유지 소재가 된다. 국민들은 권력이 생산한 시큐리티를 강매당하거나 ‘의식적’으로 구매한다. 강매는 단순히 국가폭력으로 가능하겠지만, 보다 세련된 형태의 강매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시큐리티를 구매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말이다.

여기서 민족주의라는 규율장치가 등장한다. 법이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권력장치라면, 규율은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권력장치다. 그리고 규율은 법과 달리 각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침투해 자발적이고 충순한 주체를 만든다. 인간을 자동인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장치이다. 애국가가 울리면 반드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한다는 생각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관념인가? 대부분 이기적 인간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 이기심이 범위만 확대돼 지역감정으로 변지고, 더 나가 민족주의가 되면 그것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찬사의 대상이 된다. 흥미로운 자기변신이다.

언제나 민족주의의 열매는 지배권력이 따먹는다. 그리고 또 언제나 민족주의의 썩은 낙과는 민중들의 몫이었다. ‘국체수호’를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일본이나 그 식민지 민중들이 전쟁터로 내몰렸는가? ‘민족해방전쟁’이란 명분으로 또 얼마나 많은 한반도 사람들이 고통받았는가? 수백 수천만 민중은 죄도 없이 죽어 갔으나 정작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지배권력은 그 이후에도 온전히 건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민족을 외친다.

최근 중국의 반일시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의 민족주의는 더 더욱 국가권력에 의해 생산되고 또 유통된다. 일종의 직영체제다. 1999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2005년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시위, 그리고 최근의 반일 시위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 먼저 중국정부의 일본 비난, 인민들의 거리시위, 시위의 확산 및 폭력화, 정부 및 관영언론의 자제 요청(“이성적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시위의 소멸. 일본 제품을 때려부수던 거리의 인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는 자기확신을 가진 채 말이다.

신해혁명기 중국의 문호 루쉰은 『아Q정전』을 통해 중국인민들이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현실의 권력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고난을 “정신 승리법”이라는 우둔한 자기합리화로 정당화하는 아Q! 무고한 사건에 연루돼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아Q! 이러한 아Q의 초상화는 비단 중국을 넘어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흥분하는 동북아 민중들 모두의 것이 아닐까? 영토분쟁의 배후에 작동하는 권

력에는 눈을 가린채 민족의 생존과 영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히틀러식 절멸전을 주장한다. 생김새도 별반 차이 없는데 극도의 인종주의가 난무한다. 물론 거기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결과쯤이야 민족자존을 위해 치른 작은 대가일 뿐이다. 현실과 너무도 괴리된 정신승리법이다.

### Ⅲ. 무엇을 할 것인가?

권력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원’이다. 아무리 광포한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중을 동원할 수 없다면 권력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배권력의 역사는 곧 동원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동원을 거부하는 것일 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대전의 총알받이 신세가 될 인민들이 차르정권의 민족주의적 동원을 거부했기에 가능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저항은 1921년 크론슈타트 봉기가 새로운 권력집단인 볼셰비키에 의해 폭압적으로 진압당한 뒤 소멸되어 갔다. 이후 소련의 역사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동원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권력을 ‘삐딱하게’ 들여다보려는 비판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비판적 사고에는 비겁한 머리보다는 용기 있는 가슴이 필요하다. 비판적 이론은 단순한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용기이다. ‘동북아 영토분쟁을 권력놀음으로 삐딱하게 보려면 우선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각인된 규율장치를 떼어 버리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 속 인공자궁에서 탈출하는 네오처럼 말이다.

조어도는 중국 것인가? 센카쿠열도는 일본 것인가? 북방도서는 일본 것인가? 남쿠릴열도는 러시아 것인가? 우리가 동북아 영토문제를 ‘성찰’ 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런 국가중심적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가 나타나기 전 그곳에 살던 류구인들은 어디로 갔으며, 또 아이누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오기 전 독도에 살던 그 수많은 바다 물범 강치는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모두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난사와 다르지 않다.

언제나 역사는 권력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또 그게 진실인양 강요되어 왔다. 그리고 그 권력중심적 역사를 통해 민중들은 동원되어 왔다.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의 배후에는 민족주의라는 권력의 공고한 규율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한 용기 있는 고민과 저항이 없

다면, 권력은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영토분쟁을 통해 민중을 동원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아Q처럼 허망한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장막부터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은 결국 용기이다.(2012/09/28)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